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4월

현장 전문가·지역리더 151명 ‘KREI리포터’ 선발·위촉 농촌 현장 정보네트워크 강화, 농정연구의 파트너



‘KREI리포터’ 발대식 및 연찬회를 4월 3일과 4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가졌다.

우리 연구원(영문약칭 KREI)은 4월 3일과 4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농촌 현장과의 정보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KREI리포터’ 151명을 선발·위촉하는 발대식 및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에 KREI리포터로 위촉된 151명은 연구원이 운영하는 현지 통신원과 벤처농업대학졸업자 중에서 시군별로 엄선한 현장전문가와 지역의 리더이다.

발대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소통부재로 발생하는 농업·농촌문제를 해소하고 농촌현장의 연구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KREI리포터’를 발족했다”고 밝히고, 농정연구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4개 권역 대표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창용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원 소개와 KREI리포터의 활동을 안내하였다.

조선대 김병조 교수(방송인)는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김 교수는 농촌을 이끌어 가는 참석자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며

“KREI리포터로서 자부심을 갖고 농촌 현장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김병률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농업미래와 지역리더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의에서 농촌 현장 전문가이자 지역 리더인 KREI리포터의 역할에 대해 강의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연구원 본부장 및 팀장들과 리포터들이 권역별로 나눠 농촌현안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KREI리포터들은 앞으로 농촌현장의 여론과 농정추진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원에 전달함으로써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원은 KREI리포터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화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농촌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데 힘쓰고, 생산자인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도농소통 상생협력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KREI리포터들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발전적인 농정 여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리포터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포터 블로그 개설·운영



KREI리포터 사랑방(blog.krei.re.kr/reporter)은 연구원의 리포터 커뮤니티로 2009년 4월 초에 개설했다. 리포터 사랑방은 지역의 농업·농촌관련 현안문제,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여론, 농정건의, 연구제안 등을 알려주는 ‘현장 농업소식’, 지역 농업소식을 격주단위로 알려주는 ‘격주 리포트’, 자유발언대인 ‘리포터 한마디’, 권역별 리포터 간 소그룹 모임이나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리포터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연구원과 소통하기’를 통해 마일리지 점수 안내, 정보변경, 문의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블로그에 입장하려면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 우측 하단 ‘KREI리포터 사랑방’으로 입장하거나, 연구원 블로그 리스트 중에서 ‘KREI리포터 사랑방’을 찾아가면 된다.

농업관측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관측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워크숍을 가졌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4월 17일과 18일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농업관측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담당자와 각 품목관측 팀장 및 팀원들이 참석하여 농업관측을 한단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김정호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은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관측정보 확산을 위해서 농업관측사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이와 관련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노병환 농식품부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식품부와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관측사업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농수산물 통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통계업무의 통계청 이관 이후 통계 조정 및 축소 방안에 대한 농식품부와 농업관측정보센터 및 유관기관 등 통계 수요자 간에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업관측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서는 농업인에게 좀 더 알기 쉽고 신속한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고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월보 발간 위한 관측회의

과일·과채관측팀은 과채관측 5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를 4월 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그리고 4월 21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4월 22일 경북농업기술원에서 6월호 과일관측 관련 지역자문회를 개최했다.

임업관측 표고버섯 5월호 발간을 위한 자문회의를 4월 9일 문경산림조합, 뚝은감 5월호와 대추 5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를 4월 10일 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육계관측 5월호 발간을 위한 지역자문회의를 4월 14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

농경토론회 3차례 개최

연구원은 4월 8일 농경토론회를 개최, 배종하 초빙연구위원이 ‘OECD/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통한 각국의 농업지원’이란 제목으로, 송주호 연구위원이 ‘DDA에서의 농업보조금 논의동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했다. 4월 16일에는 전상근 전문연구원이 ‘산업조직론의 이해와 적용-시장지배력 측정 관련’이란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KREI 세미나

연구원은 4월 27일 중회의실에서 KREI 세미나를 개최,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시미즈 테츠로 주임연구원이 ‘일본의 FTA 정책과 농정개혁 동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농업식품포럼

농업식품포럼은 4월 7일 중회의실에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식품산업을 산업구조분석 측면에서 응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이항구 박사가 ‘산업통계기반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 일행 내원

중국농업과학원 레이마오량 부원장과 메이쉬룽 농업환경과지속발전연구소장 등 6명이 4월 21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오세의 원장을 비롯하여 권태진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과 전형진 부연구위원을 만나 상호 협력방안과 관심사를 나눴다.

과제 발굴 위해 농촌연구자문단회의 열어



4월 1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2010년 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연구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4월 1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2010년 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연구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의 원장은 현장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업인단체를 이

끌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연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강창용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원의 운영현황 및 2009년 과제, 2010년 연구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목표를 ‘선제적 정책 개발과 미래지향적 연구 수행으로 농업·농촌 선진화의 기반 구축에 두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민연합 윤요근 상임대표를 비롯 농업인단체 대표와 사무총장들이 참석했다.



김치세계화의 필요성과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최 지 현 선임연구위원

음식과 문화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산업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한국 김치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식품으로 산업화 및 상업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한국김치의 국가간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6년 3월 김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규격안을 제출했다. Codex에서 8단계의 논의를 거쳐 2001년 7월 Codex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한국 배추김치에 대한 표준규격이 채택되었다.

김치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략

김치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비빔밥, 고추장 등과 함께 기능적이면서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 7월에는 미국 건강전문잡지인 '헬스' 인터넷판에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면서 우리나라는 김치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되었다.

국내외적인 김치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최근 농식품부, 미래기획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는 국가브랜드로서 한식세계화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데 김치가 한식메뉴의 핵심으로 부상하여 김치 세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김치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치수출은 2005년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납성분 및 기생충알이 검출되면서 2006년 수출은 2004년, 2005년에 비해 각각 27%, 21% 감소하였다. 반면 김치 수입량은 2002년 이후 중국산 저가 김치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2년 1,051톤에서 2008년 222,370톤으로 약 210배 증가하여 김치 무역수지는 200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김치 수입 증가

로 수입김치 시장점유율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김치 주요 수출국인 일본시장에서도 중국산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국산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다. 일본 수입김치 시장에서 중국산 시장 점유율은 2004년 47%에서 2006년 63%로 증가한 반면 한국산은 같은 기간 45%에서 30%로 감소하였다. 중국산 김치가 격은 국내산 김치의 약 1/3, 일본산의 약 1/5에 불과해 가격경쟁력면에서 한국산 김치는 중국산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연간 김치 소비량은 1996년 40kg에서 2018년 32kg 수준으로 연평균 약 1.23%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국내 시판김치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담가 먹는 김치소비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판김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세계화에 필요한 R&D 기반 취약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김치의 규격화, 표준화 및 현지화 등 기초연구와 저장, 유통, 포장 등과 관련된 상업화 기술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연구개발(R&D) 수준은 시장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치의 R&D 완성도 수준은 발효기술의 경우 30~60%, 규격화 및 표준화 기술 50%, 포장 디자인 60~70% 등에 불과하다.

표준화 기술의 경우 대규모 공장은 원활히 시행되나 소규모 생산에서는 표준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화김치, 명인김치 등의 제품별로 다른 표준규격이 정립되어야 하며, 각 김치특성별 제조 레시피(recipe) 등의 매뉴얼화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김치관련 R&D는 업체 16개소, 공공기관 4개소, 대학 5개소 등으로 분산수행되어 관련연구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김치산업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했다. 중국, 캐나다 등은 발효식품관련 연구소 육성을 통해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연구의 통합 및 조정, 국내의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필요

정부는 2010년을 목표로 「세계김치연구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치관련 R&D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세계인의 입맛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여 한국 김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김치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하다.

세계김치연구소가 설립되면 김치 맛의 표준화·현지화, 김치를 응용한 다양한 요리법 개발 등 김치 세계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그동안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기술 및 상품화 개발 체계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김치연구소는 R&D 기능뿐만 아니라, 수출 국가에 적합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체험시설, 기존 김치 관련 산업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김치산업이 시련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 기회에 직면한 이 때에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이 우리나라의 김치중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김치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전·후방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작지만 강한 산지유통조직 만들기

국 승 용 부연구위원

규모화와 전문화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방향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호당 경지면적은 1.5ha, 농업 강소국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나 프랑스와 비교해도 1/20 수준이다. 우리가 규모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덩치만 키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개인 농가 단위로는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인 시장 판매가 가능한 규모 이상의 협업화를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산지유통 규모화 사업의 출발점이다. 규모화는 산지유통조직이 생존할 수 있는 필요조건일 뿐이며, 성공적 경영을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 즉 전략이 필요하다.

품목 선정과 핵심 경쟁력 확보

시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 측면에서 양파는 대단히 흥미로운 품목이다. 양파는 19세기 말부터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지만 연간 1백만톤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양념채소 중의 하나이다. 건조, 절임 등 양파 가공품은 다수 있으나 양파 소비량의 대부분은 신선양파가 차지하고 있다. 양파는 단가에 비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생산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품목이다. 이같은 유통 특성 때문에 양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1~3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국내산 양파가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풀빛영농조합법인이나, 신미네유통사업단과 같이 대표적인 산지유통조직이 양파를 주 품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같은 양파의 유통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유통조직은 거래 단가가 낮은 성출하기에 양파를 수집해서 효율적으로 저장

한 후에 연중 판매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양파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할 수 있는 물류 체계와 시설을 확보하였다. 특히 신미네유통사업단은 물류 전문가들도 더 이상 개선할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신미네유통사업단은 양파의 저장 시 발생하는 평균 감모율을 10% 수준으로 감축시킬 수 있었고, 이는 일반 시설의 1/3 수준에 불과하니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 직거래를 통한 판로 개척

판로 개척이라고 하면 국내 대규모 소비시장이나 해외 수출 시장을 염두에 두기 마련이다. 하지만 산지 인근의 지역 역시 중요한 소비시장 중의 하나이다. 순천시에는 내세울만한 대표 농산물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다, 남해안에 입지하고 있어서 대규모 소비지인 수도권 접근성도 좋지 못하다. 순천농협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대규모 시장에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의 다품종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직거래하는 유통 전략을 수립하였다.

순천농협의 농산물 유통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학교급식, 파머스마켓 등을 연계한 지역 직거래 체계이다.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을 계기로 순천농협은 친환경농산물을 250개 학교 6만 4천명의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천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60여 종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학교로 급식원료를 배송한 차량은 인근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순회수집하여 파머스마켓의 '농가 직거래 바구니'라는 전문 코너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3천㎡ 규모의 파머스마켓은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과 다양한 구색으로 차별화하여 인근에 입지한 국내 1, 2위의 대형마트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있다.

신뢰에 기반한 협력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이 중요시되면서 생산자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경영 기반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아산의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은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조직과 직거래하는 산지유통조직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각 품목별로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가격변동 없이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액의 1%를 적립하여 자연 재해 등으로 예상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콩 재배 농가가 경작지를 규모화된 농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대신 콩 가공공장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를 통해 콩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영세 농가의 소득도 안정시킬 수 있다. 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을 싣고 온 농민의 얼굴에 미소와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 본 몇 가지 사례들은 지나치게 특수해서 모든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이 세운 전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작지만 강한 산지유통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산지유통조직이 스스로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길 때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은 복잡하고 틈새는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R**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안목으로 보자

허 장 연구위원

우리나라가 사료용으로 해마다 많은 양을 수입하는 옥수수 가격이 2006년부터 2년 사이 세 배로 뛰어들었다가 불과 6개월 사이에 다시 절반으로 폭락했다. 그 사이 세계 곳곳에서 곡물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잇달았다. 식량안보 비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았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과 동물이 굶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도 나왔다. 놀란 가슴에 해외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구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퍼져 나갔다.

많은 연구들은 곡물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인도 같은 인구대국의 식량소비가 늘고, 기후변화와 농지면적의 축소로 농업생산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곡물메이저가 전 세계 곡물교역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수요, 공급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 식량기지 건설, 가능한가?

새로 들어선 정부는 식량, 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확보”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이 수립되고, 해외농업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업체에 올해부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융자금 지원의 조건 중에는 식량위기 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곡물 등을 국내반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여기서 의문점이 떠오른다. 해외에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진출해서 농지를 임차하고 경작하며 곡물을 수집해서 원료곡으로 혹은 1차 가공해서 식량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수입하자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민간부문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도는 이러한 국가적 의도와는 다르다. 많은

기업들, 단체들이 제도와 관습이 천차만별이고 조변석개하는 연해주,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때로는 비싼 ‘수입료’를 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짓고 현지에서 가공·판매·수출을 해 왔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의욕 날로 커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내 농업 및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 보다 많은 농업인, 업체들이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타개해 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 곡물 등 식량의 국내반입을 위한 해외식량기지 건설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할 때 자칫 해외농업개발의 중장기적 추진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를 들어보자. 필리핀은 옥수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품질도 괜찮은 데다가 거리도 가까워서 사료곡물 확보를 위한 좋은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의 총 옥수수 자급률은 95%이고 지역별로 생산량에 큰 편차가 있다. 주산지인 이사벨라 주에 가면 옥수수 해외수출은 문제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투자를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 옥수수 가격이 다시 세 배로 뛰게 되면 필리핀이 옥수수 수출을 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일은 중국이 곡물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이 일시적이지만 쌀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곡물가 시기에 실제로 벌어졌다.

해외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반입이 WTO 협정과 같은 통상협정에서는 국가

간 농산물 교역으로 이해된다는 점도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농산물과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얘기도 있다. FTA를 맺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든가,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해외농업개발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격과 품질 자체의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정책적 지원일 뿐이다.

국내농업의 국제화 기회로

중장기적 해외농업개발은 국내 반입을 목적으로 한 식량공급기지 혹은 해외 비축기지로서의 해외농업개발을 넘어 보다 다양한 목적의 진출을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같은 곳은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제3국(유럽지역)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농업기술인력과 농업자본의 새로운 고용기회와 소득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 농기계, 농자재 산업, 가공·유통 시설 분야에서의 농업자본과 기술을 동반한 해외진출로 농업의 신성장동력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곡물가 하락 혹은 안정기에 민간기업은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해외진출에 소극적일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자금을 활용한 현지 농업기반 시설, 유통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농업투자환경 조사, 농촌지역개발 지원, 국제협력 MOU 체결 등으로 민간부문의 장래 진출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을 지원하는 국제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곡물가가 급등하는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한 금융지원, 곡물수입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모색을 공공부문이 지원하여야 한다. 

푸드 마일리지, 지역농업 진흥과 지구 환경부하 경감

김태곤 연구위원

시장개방에 의해 무역이 증대되고 수송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이 생산되는 '생산현장'과 가공·유통을 거쳐 소비되는 '소비지역' 간의 거리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식품은 수송거리가 확대될수록 수송에너지에 의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불안요인을 증폭시킨다.

시장개방 등 식품의 수송거리 확대

식품의 수송거리는 왜 확대되고 있는가.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생산과 국민의 소비 간에 괴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쌀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축산물이나 유지류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 최대 요인이다. 또한 교통망이 확충되고 저장이나 가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통이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식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농업이 축소되며,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나아가 자원이나 환경에 대한 부하를 증대시키는 문제가 지구 전체로 확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영국의 소비자 운동가 팀랭(Tim Lang)은 '푸드 마일'(food miles) 개념을 사용하여 가급적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감축이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식품수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환경에 주는 부하를 파악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의 '수송량(ton)과 수송거리(km)를 누적적으로 정량화한 것이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이다. 소비자는 푸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국산품을 활용하면 수입품에 비해 수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푸드 마일리지의 한계로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철도나 선박 등 수송수단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까지나 수송단계만 착안한 것으로서 생산과정이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수송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항공·트럭·선박·철도 등의 순으로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푸드 마일리지의 크기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수송수단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파악하여 배출총량을 계산하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농산물은 수송단계 이외에 생산·가공·소

비·폐기 등의 단계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푸드 마일리지는 수송단계만을 고려하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국내산 식품을 소비했다고 해도 과도한 화학비료를 시비하였거나 시설배재 등에 의해 수송단계 이외의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큰 경우가 있다.

따라서 푸드 마일리지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정합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푸드 마일리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수송수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계산하여 이것을 푸드 마일리지에 곱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한 '포코'(poco)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100g 배출이 1포코이며, 이를 식품 등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소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국제수송에 대해서도 배출량의 감축방법에 관한 국제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에는 국제항공이나 해상운송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방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감축목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구체적인 감축방법으로는 연료 판매국, 승객이나 화물의 원산국, 항공·선박의 출발 또는 도착 국가, 항공·선박의 국적 등에 따라 배출감축을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식품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푸드 마일리지를 경제학 내지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풍요로운 식생활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구 환경부하나 식품 안전성이라는 면에서 우려가 큰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수송량이 많을수록 수송거리가 멀수록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커지면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진다.

푸드 마일리지 감축이 지구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

푸드 마일리지 감축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생산과정이나 소비과정에서 환경부하 경감을 전제로 하면서 수송거리를 단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 농업이나 지역순환형 농업을 실시하면서 국내생산 확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다.

로컬 푸드와 관련한 신토불이, 지산지소(地產地消), 슬로우 푸드(slow food), 공동체지원농업(CSA) 등과 같은 운동도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자급률 향상과 지역농업 진흥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지구 환경부하 경감에도 기여한다. 

4월 주요 농정 동향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발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 2일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은 일자리 창출, 타 산업 경험 유입을 통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 활력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직후 절정에 달했던 귀농인구 유입 규모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9세 귀농자 비중이 1998년 74.4%에서 2008년 46.3%까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0세 이상 귀농자 비중은 2.7%에서 23.8%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또한 2008년 3월 23개 시·군에서 귀농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농정착안정화 사업, 정착금 지원, 영농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정보 제공,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창업·정착 지원 등과 함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귀농교육 실시, 농산업 인터넷 확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화하였고, 농어촌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정착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협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방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1994년 「농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제기되어 온 의제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치중, 경제사업 소홀,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만성화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3월 31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은 정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경제연구소 등의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본 원칙에 입각한 제안을 담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이번 안은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하여 경제사업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신설하여 시장 대응력을 높이며,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함과 동시에,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독립 법인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 농협은 농산물 판매를 책임지는 체제 구축을 통한 수취가격 인상과 조합원 이익 증대', '기존의 보조지원 중심의 간접적 경제사업 대신 직접적 경제사업 확대 및 경제사업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등이 있다. 또한 자본조달 능력 향상 및 건전성을 강화하

고 상호금융연합회와 상호금융중앙금고(사업조직)를 통해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동시에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도 기대하고 있다.

2008년 농가 및 여가 경제 조사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14일 '2008년 농가 및 여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06년 3,230만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여 2008년에는 3,052만원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2008년 31.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농외소득(37.2%)과 이전소득 비중(31.1%, 비경상소득 포함)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농가들이 농업소득 감소를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8년 농업총수입은 2003년 대비 9.5% 증가했으나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비가 24.2%가 상승하여, 농업소득은 8.7% 감소한 965만원으로 1995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년과 비교할 때 농업총수입은 1.0%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3.1% 증가하여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7.2% 감소하였다.

호당 평균 농가자산은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경기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2007년 대비 13.8% 감소하였다. 농가 부채 역시 2007년 대비 13.9% 감소하여, 장기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부채-자산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7.6%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농가부채에서 농업용 부채 비율이 2003년 65.6%에서 2008년 52.7%로 매년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경기침체와 소비둔화 등으로 모든 형태의 농가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전문농가의 농가소득이 일반농가의 2.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형태별로 부업농가 소득 증가율이 주업농가(전문농가, 일반농가)보다 더 높았다. 농업소득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농가와 일반농가는 농업수익성의 악화로 농가소득 증가율이 낮지만, 부업농가는 농외소득을 통해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농형태별로 축산농가 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특작, 화훼 순이며, 전작과 논벼 농가 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변화에서도 특작, 축산, 화훼 순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화훼농가의 경우 전년보다 농가소득 감소 폭이 컸는데, 유가 상승이 시설원에 경영비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40대 이하 젊은 경영주 가구의 평균소득이 4,662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실)

농식품부·농진청과 기후변화 대응 위한 공동방안 모색



‘저탄소녹색성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정책워크숍을 4월 23일 개최했다.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축산·환경팀은 4월 23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담당자와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축산·환경팀 연구진, 국립농업과학원 및 축산과학원의 축산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의 연구진이 참석했다.

박현태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관련 연구자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창길 축산·환경팀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로 모든 산업이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저감목표량을 달성하는 경우 농업부문에서 5,936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들과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휴경 농경지 초목 조성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 목록을 제시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이덕배 기후생태 과장은 “농업부문은 온난화 방지효과, 논의 수자원 관리기능 등의 기후변화 적응기능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강희설 축산환경과장은 향후 자연순환농업 연구방향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수요증대, 축산 악취 저감 및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화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이지바이오시스템 현영 박사는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플랜트 사업의 제약 요건들을 설명하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립대 김운순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감보다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한경대 김창현 교수는 바이오 플랜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들을 제시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승진 과장은 바이오매스, 전과정평가(LCA),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친환경농업 정책화 등 시급한 정책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 연구진 동정

△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4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4월 15일 대구 대학교서 열린 경북포럼에서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4월 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쌀산업 생산·유통개선을 위한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4월 7일 강원 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농수산포럼에서 ‘세계 농수산물시장 동향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 김병률 연구위원은 4월 9일 농협안성 연수원에서 성공농업 MBA 과정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4월 22일 충청남도 도와 대전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워크숍에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국승용 부연구위원은 4월 3일 aT센터에서 열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공직자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농산업부문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워크숍 개최



‘농산업부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워크숍’을 4월 21일 개최했다.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농산업팀은 4월 21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농업정책국 기술정책과와 공동으로 ‘농산업부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농식품부 김응본 농생명산업팀장과 오병석 기술정책과장을 비롯한 기술정책과 팀원, 그리고 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예작물부장이 참석했다. 세종데이터해석연구원 엄기철 원장과 한국농업대학 이영석 교수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농식품부 김응본 농생명산업팀장은

‘강한 농식품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자재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농자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농자재 가격 안정 단기 대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오병석 기술정책과장은 ‘첨단기술로 농업의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R&D)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 R&D 투자 방향, 미래전망 등을 발표했다.

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예작물부장은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제품 개발 보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 연구원의 김연중 연구위원은 ‘원예작물의 가치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가치사슬의 개념과 구성, 접근방법, 가치창출 증대 방안을 발표하고, 버섯을 중심으로 원예작물의 가치창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제시했다.